



한국외교 60년

제3장

유엔 및 다자외교

제1절 유엔외교 | 168

제2절 보편적 가치 추구와 범세계적 문제 대응 | 194

제3절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 206

제3장 유엔 및 다자외교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한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은 우리 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전까지 한국의 유엔외교는 동서 냉전에 따른 남북한의 외교적 대결과 유엔 가입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91년 유엔 가입으로 본연의 유엔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국제평화와 안보뿐 아니라, 인권, 개발, 환경, 테러리즘 등 범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다자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등을 역임하였으며, 제56차 유엔 총회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2007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1993년 소말리아 평화유지단 파견을 시작으로 앙골라, 서부 사하라, 레바논 등지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의 유엔 등 국제기구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제무대에서 중견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제1절 유엔외교

1.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가. 정부 승인과 통일을 위한 유엔외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 결의 제112(II)B호에

입각하여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감시하에 실시된 총선 결과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이후 정부의 최우선 외교과제는 신생 정부로서 국제적 승인을 얻고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정통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한국의 유엔외교는 1948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총회에 장면 박사를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제3차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에 참석한 장면 대표는 12월 6일 한국의 분단이 소련의 음모와 북한의 계략으로 장기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유엔이 조속히 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회원국들이 한국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해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찬성 48, 반대 6(기권 1)의 압도적 다수로 총회 결의 제195(Ⅲ)호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한 선거를 통해 수립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점령군이 가급적 조속히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호주, 중화민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및 시리아의 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위원단(UNCOK: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이 UNTCOK의 활동을 계승, 한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임무 등을 수행토록 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1949년 제4차 유엔 총회에서도 한국의 안전과 통일을 추구하는 기본 입장에서 유엔외교를 전개하였다. 1949년 9월 제4차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에서 조병옥 수석대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하여 UNCOK의 존속 및 강화와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유엔 총회는 결의 제293(Ⅳ)호를 채택하여 UNCOK을 존속·강화하는 동시에, 동 위원단이 대의제(代議制) 정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 한국에 걸쳐 관찰과 협의를 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결정하였다.

한편,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북한 정권은 유엔의 권능을 부인하였으며, 1949년 9월 10일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 앞으로

보낸 항의서를 통하여 한국 통일에 유엔이 간섭하지 말 것과 북한 대표의 참가 없이 채택된 한국문제에 관한 결정은 일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나. 한국전쟁 시기의 집단안보외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유엔 헌장상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S/1501)을 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슬라비아), 결석 1(소련)로 채택, 적대 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도선 이북으로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결의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과 북한에 대한 지원 제공을 삼갈 것을 촉구하였다. 당시 장면 주미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결의안을 즉각 채택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침략 행위를 계속하자, 해리 트루만(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은 6월 27일 한국군의 지원을 위한 미 해·공군의 출동을 명령하고, 미국 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S/1511)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같은 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찬성 7, 반대 1(유고슬로비아), 투표 불참 2(이집트, 인도), 결석 1(소련)로 채택되었다.

이어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찬성 7, 반대 0(기권 3, 결석 1)으로 채택한 결의(S/1588)에서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병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관(유엔군 사령부)하에 두도록 권고하면서, 미국에게 통합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통합사령부에 참전 각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 결의에 의거하여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를 통합사령관에 임명하였으며 지상군 병력을 파견한 16개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터키, 콜롬비아, 남아연방,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대한민국의 군대가 통합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같이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응하여 침략군 격퇴를 위한 파병을 하고 이들 병력을 안보리가 설치한 통합사령부 휘하에 편성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편, 소련은 그해 7월 27일 그동안 거부해 오던 안보리로 복귀를 통고하고, 운번제에 따라 8월 1일부터 안보리 의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는 한국문제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유엔 총회는 미국이 제출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을 총회 결의 제377(V)호로 11월 3일 채택하여,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현장상의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직후인 10월 7일 유엔 총회는 미국 등 8개국의 공동 제안으로 총회 결의 제376(V)호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호주,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및 터키 등 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을 설치하여 종전의 UNCOK을 대체하고, 동 위원단에게 한국에 통일·독립된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한국 내 구호와 재건의 책임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유엔은 1950년 12월 1일 총회 결의 제410(V)호를 기반으로 한국 부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엔 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을 설치하였다.

1950년 11월 6일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자 유엔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에서 유엔군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벌임으로써 침략에 가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유엔군에 대한 적대 행위 중지와 한국에서의 철수를 촉구하는 총회 결의 제498(V)호를 찬성 44, 반대 7(기권 9)로 채택하였다. 이듬해 5월 18일에는 총회 결의 제500(V)호를 통하여 모든 회원국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그동안 임병직 외무장관과 장면 주미대사를 유엔에 파견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해 오던 우리 정부는 유엔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위해 1951년 11월 6일자로 임병직 장관을 초대 주유엔 상임옵저버(대사)로 임명하고 뉴욕에 주유엔 옵저버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1951년 초반 이래 한국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6월 23일 야콥 말리크(Jacob Malik) 주유엔 소련대사가 정전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정전회담이 개시되었다. 그 후 2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어 3년 1개월에 걸친 한국전쟁이 일단 종식되었다.

정전협정 조인 이후 유엔 총회는 1953년 8월 28일에 결의 제712(VII)호를 채택, 침략에 대항하여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병사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유엔의 요청에 따라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취한 집단적 조치가 성공한 데 대하여 만족의 뜻을 표명하였다.

2. 유엔 가입 이전 유엔외교

가. 한국문제 연례 상정

정전협정 제60조와 1953년 8월 28일자 유엔 총회 결의 제711(VII)호에 따라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4년 4월 26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이 끝내 결렬되자 한국문제는 유엔 총회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유엔 총회에서 UNCURK 연차 보고가 자동적으로 총회 의제에 포함되어 한국문제를 매년 토의하게 되었다.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대표를 단독 초청하여 동 토의에 참석시킨 가운데 유엔 감시 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한국 통일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하여 왔다. 1953년 정전 이래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 유엔의 한반도 통일 원칙 재확인과 UNCURK 활동의 존속을 확보하여 유엔을 통한 평화통일 추구 방침을 관철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친북한 국가들의 북한 대표 초청 시도를 계속 봉쇄하여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국제사회에서 확립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해’로 불렸던 1960년부터 새로 유엔에 가입한 다수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당시에 발족된 비동맹 운동의 영향으로 다분히 반서방적 성향이 노정되자 한국문제 토의 양상도 상당히 변모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한국 통일 원칙을 재확인하는 본질적 문제 토의보다는 남북한 대표를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시킬 것인가에 관한 절차문제 토의에 보다 민감하게 나타났다. 또한 1961년 4월 12일 미국의 아들라이 스티븐슨(Adlai E. Stevenson) 대사가 조건부 동시 초청에 관한 수정결의안(A/C. 1/837)을 제출, 99개 회원국 중 찬성 59, 반대 14(기권 23, 결석 3)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른바 ‘스티븐슨 방식’이라 불리는 타협안으로서 한국과 미국 등 우방들이 1960년대 유엔 내 세력 분포 변화에 따라 종전의 한국 대표 단독 초청 방식보다 남북한 대표를 함께 초청하되, 북한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엔 총회의 조건부 초청에 대하여 북한은 4월 17일 북한 대표의 참가와 동의 없이 채택된 유엔의 어떤 결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로 1967년까지 유엔 총회에 연례적으로 상정된 한국문제 토의 양상은 대동소이하였다. 즉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조건부 남북한 동시 초청 방식으로 북한 대표 초청을 봉쇄하고 한국 대표단이 정치위원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초청되어 발언하였으며, 본질문제에 있어서는 유엔의 한반도 통일 원칙을 재확인하고 UNCURK 활동을 존속시키는 서방측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는 형태가 되풀이되었다.

나. 한국문제 연례 상정 지양 노력

1968년부터 유엔 내 세력 분포가 점차 변화하면서 득표 노력에 상당한 외교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비생산적 토의에 그치게 되자, 한국문제의 자동적인 연례 토의를 중단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UNCURK가 연례 보고서를 반드시 총회에 제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재량 상정 방식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총회 결의 제2466호, 1968년). 그러나 친북한 세력이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여 한국측도 대응 안건을 총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한국문제가 토의되었으며 표대결도 불가피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 대신 유엔 내 대표권을 확보하게 되고 유엔 내 비동맹 회원국의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유엔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재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과 긴밀한 협의하에 한국문제 토의를 운영위원회의 의제 채택 과정에서 연기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1971년 9월 23일 제26차 유엔 총회는 한국이 제출한 한국문제 토의 안건 일괄 연기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켰다. 이 시기에 비동맹 국가와 경제, 통상, 문화교류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 고수’와 ‘두 개의 한국 불용인’이라는 원칙하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던 국가가 북한과 수교하는 경우에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적용하여 그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여 북한의 침투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 남북한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그해 제27차 유엔 총회에서도 전년도와 같은 유엔전략을 추진기로 하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한 결과, 한국 문제 토의 연기안이 운영위원회와 총회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다. 한국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외교 대결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앞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은 유엔정책에도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동 선언 제7항에서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통일 시까지 잠정조치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우방국은 물론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현실적 전환으로 제28차 유엔 총회에서는 미국 등 핵심 우방국과 협의하에 토의 연기보다는 한국문제 상정 토의에 적극 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6.23 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한 대표 동시 초청에 반대하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 입장을 견지하되 UNCURK의 경우 동 위원국 가운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국가도 있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자진 해체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북한은 197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7월 뉴욕에 읍저버 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미국 등 서방측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제28차 총회 시 처음으로 한국문제 토의에 초청되어 읍저버로 참가하여 명실공히 남북한 및 그 지지 세력 간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자유 우방국들이 남북대화 환영, 주한유엔군 문제를 안보리에서 관련 당사국과 협의, UNCURK의 자진 해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환영을 골자로 하는 공동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UNCURK 해체, 주한외국군 유엔기 사용권 박탈,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한외국군 전면 철수를 주장하는 공동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1973년 10월 27일 한국문제에 관한 각서에서 정전 이행을 위한 대안이 마련 되면 주한유엔군 사령부의 장래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국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유엔에서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제28차 유엔 총회에서의 남북한 간 대결은 비동맹권의 급진화 여파로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나, 때마침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비밀 방문 등으로 미·중 간의 화해 분위기가 급진전되고 있었으므로 유엔에서도 동서 진영 간 냉전적 표대결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양측 지지 세력 간의 막후교섭 결과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추구와 UNCURK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으며, UNCURK는 1973년 11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3년간에 걸친 한국 내 활동을 종결하였다.

제30차 유엔 총회는 1975년도 8월 리마(Lima) 비동맹 외무장관 회의에서 월맹과 북한이 비동맹 그룹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되어 비동맹 내 급진 좌경 세력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및 친북한 세력의 공세에 대비하여 우방국과 유엔전략을 긴밀히 협의하고 남북대화의 계속을 촉구하였으며 모든 직접 당사자가 정전협정 대안 및 항구적인 평화 보장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희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5년 9월 22일 제3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문제에 대하여 남북한, 미국, 중국 간의 4자회담을 제의하여 한국측의 전략적 입장을 강화시켰다. 이에 반해 북한측 결의안은 유엔군 사령부의 무조건 해체, 주한외국군의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한의 동등한 군비 축소 등을 요구하였다.

표결 결과, 본질적으로 내용이 상반되는 두 결의안이 함께 통과되는 이변을 낳게 되었다. 즉, 한국측 결의안(제3390A호)은 찬성 59, 반대 51(기권 29)로, 북한측 결의안(제3390B호)은 찬성 54, 반대 43(기권 42)으로 각각 통과된 것인데, 이는 한국문제에 관한 한 유엔의 해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라. 한국문제 토의 중단

제30차 총회 이후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협의하여 유엔에서 남북한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대결을 피하고, ‘7.4 공동성명’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기본 정책 아래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 중단을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반면 북한 및 친북한 세력들은 1976년 8월 16일 남한에서 핵무기 철수,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등 강경한 내용의 공동 결의안을 제31차 총회에 선제 제출하려다가 총회 개막 직전에 제출 안건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결의안을 철회한 배경에는 첫째, 그해 8월 콜롬보(Colombo)에서 개최된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 때 북한이 채택을 추진한 친북한 일변도의 결의안이 많은 온건 비동맹국의 반대로 크게 수정되었다. 둘째,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의 국제적 위신과 신뢰도가 친북한 세력 내부에서조차 크게 추락하여 북한측 결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1970년대 비동맹외교로서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 및 대(對) 비동맹 실리외교를 추구하였다.

그 후 1977년 제32차 유엔 총회 이래 북한측은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의 한국문제 상정 및 토의 중단 방침이 그대로 관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 1980년대 유엔외교 활성화

1980년대 유엔에서 한국문제는 1983년과 1987년 대한항공기 격추 및 폭파 사건에 대한 안보리 토의와 1983년 랭군(Rangoon) 암살 폭발 사건이 유엔 총회 제6위원회 토의를 통해 논의되었다.

1983년 9월 1일 KAL 007편 여객기가 사할린 남단 해상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하여 격추되자 정부는 9월 2일 미국, 일본, 캐나다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안보리 회의가 9월 3일-12일간 6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동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은 호주 등 17개 우방국 공동 명의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사건 진상 조사 및

보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 9월 12일 제6차 회의에서 찬성 9, 반대 2(기권 4)로 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9표를 확보하였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안보리 상정은 한국이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를 통하여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여론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 9월 20일부터 개최된 제38차 유엔 총회에서도 69개국 대표가 기초연설을 통해 KAL기 격추 사건을 규탄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1983년 10월 9일 우리 정부의 고위관료 등 17명이 사망한 랭군 암살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었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테러 만행을 규탄하기 위하여 유엔 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의 ‘국제테러 방지’ 의제 토의 시 동 사건을 제기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랭군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의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우방국들을 상대로 외교교섭을 전개하여 의제 토의 시 랭군 테러 만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 12월 6-7일간 제6위원회에서 ‘국제테러 방지’ 문제 토의 시 한국을 포함한 45개국 대표가 북한의 랭군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테러 행위에 대한 국제여론의 공동 응징을 촉구하였다.

1987년 11월 29일에는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KAL 858편 여객기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2인조 공작원들이 장치한 시한폭탄 폭발로 추락하여 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1988년 2월 10일 일본과 함께 동 사건 논의를 위한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였고, 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2차에 걸쳐 안보리 이사국 15개국과 한국, 바레인, 북한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 제출 없이 토의만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광수 외무장관은 북한의 테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테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안보리 9개 이사국과 바레인 이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친북한 이사국인 소련과 중국까지도 북한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테러 행위가 국제적 규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어 주요 우방국의 개별적인 대북한 응징 조치가 취해졌다.

1980년대에도 우리 정부는 비동맹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방문·초청외교와 함께 한국의 경제성장과 높아진 위상을 기반으로 경제, 통상, 기술협력 등을 확대해 나갔고 제3세계 국가가 대거 참가한 1988년 서울 올림픽게임은 제3세계 국가와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변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국가들과 실질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비동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하였다.

3. 유엔 가입과 다자외교

가. 유엔 가입을 위한 외교 노력

우리 정부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추구하는 범세계적 기구로서 유엔의 중요성과 특히 대한민국과 유엔 간 긴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3차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인 1949년 1월 19일 당시 고창일 외무장관 서리 명의로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한국의 가입 신청은 신규 회원국 가입심사위원회를 거쳐 1949년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안보리에서 토의되었다. 여기서 한국의 유엔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은 찬성 9, 반대 2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부결되어 한국의 첫 번째 유엔 가입 시도는 좌절되었다.

북한은 1949년 2월 9일 유엔 가입을 신청하여 이 문제가 2월 16일 안보리에서 토의되었는데, 동 신청을 신규 회원국 가입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소련의 결의안이 찬성 2, 반대 9로 부결됨에 따라 북한의 시도는 신규 회원국 가입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못하고 기각되었다.

한국의 가입 신청에 대한 안보리의 토의 경과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제4차 총회에 제출되어 특별정치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의되었다. 총회는 특별정치위원회의 보고를 기초로 1949년 11월 22일 본회의에서 안보리에 한국 가입 신청의 재심을 요구하는 결의(총회 결의 제296(IV)호)를 찬성 50, 반대 6(기권 3)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의 토의는 안보리에서 소련이 계속 반대하여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51년 12월 22일 장면 국무총리 명의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가입문제를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안보리에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가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1955년 12월에 소위 '18개국 일괄 가입안' 이 논의되었을 때 비로소 한국의 가입문제도 다시 논의되었다. 같은 달 13일 안보리에서는 '통일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18개국 전부'의 유엔 가입을 권고하자는 브라질과 뉴질랜드의 결의안과 관련하여, 중화민국과 미국이 유엔과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한국과 월남의 가입도 권고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동 수정안은 찬성 9, 반대 1(기권 1)이라는 절대 다수의 지지를 획득했으나 역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부결되었다.

1956년 제11차 총회에서는 다시 미국을 위시한 13개국의 공동제안으로 한국의 가입 신청에 관한 재심을 안보리에 요청하는 결의안이 특별정치위원회에 제출되고, 같은 해 2월 28일 총회 본회의에서 찬성 40, 반대 8(기권 16)로 가결(총회 결의 제1017(XI)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입문제는 그해 9월 9일 안보리에 다시 상정되었고 한국 가입을 권고하는 8개국 결의안(S/3884)이 11개 이사국 중 10표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소련의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거듭 부결되고 말았다. 당시에도 소련은 8개국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형식으로 남북한 동시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S/3887)을 제출했으나 찬성 1, 반대 9(기권 1)로 부결되었다.

한편, 10월 9일 미국 등 13개국은 안보리의 한국 가입 권고안 부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유엔 가입 자격을 재확인하는 공동 결의안을 제12차 총회 특별정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 위원회 권고에 따라 총회 본회의는 1957년 10월 25일 동 13개국 공동 결의안(총회 결의 제1144(XII)호)을 찬성 51, 반대 9(기권 21)로 가결하였다.

1958년 제13차 총회 기간 중 미국은 상기 총회 결의 제1144A(XII)호에 입각하여 안보리에서 한국의 가입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한국 가입 권고 4개국 공동 결의안이 9표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역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소련 대표는 1957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가입 권고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찬성 1, 반대 8(기권 2)로 부결되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한동안 유엔 가입 노력을 중단하였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서 북한의 유엔 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여 유엔 가입 정책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 6월 23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 하의 유엔 가입을 제안하여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북한은 그 이후 유엔 동시 가입 반대,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을 계속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는 1975년 제30차 총회에 앞서 남·북월남의 유엔 가입 신청 기회에 한국의 유엔 가입 신청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8월 6일 안보리에서의 의제 채택 과정에서 찬성 7, 반대 6(기권 2)으로 소요 다수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고, 9월 21일자 재신청도 찬성 7, 반대 7(기권 1)로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도 우리 정부는 유엔 가입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의 유엔 가입의 당위성을 유엔 회원국들에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국력 신장을 배경으로 유엔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85년 10월 21일 노신영 국무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가입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으며, 1987년 8월 18일에는 유엔 안보리 문서(S/19054)로 유엔 가입 당위성에 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을 배포하여 회원국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하여 북방외교를 활발히 추진하고, 소련, 중공 등 공산권 국가들도 대거 참가한 서울 올림픽게임의 성공으로 한국의 유엔 가입 당위성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주변 정세도 한국의 유엔 가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나. 유엔 가입과 한국외교

1990년은 한국의 유엔 가입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통하여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발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과 1990년 9월 30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중국 과도 1990년 10월 20일 무역대표부 상호 교환 설치에 합의하였다. 남북한의 유엔 가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 입장은 제4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조지 H. W. 부시(George H. W. Bush)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초로 한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지지한 것을 비롯하여 71개국의 대표가 한국의 유엔 가입을 적극 지지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소위 단일 의석 가입안을 지지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호전에 힘입어 1991년 우리 정부는 유엔 가입 실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정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 외무부 업무보고 시뿐만 아니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울 총회 개막 연설 시(4월 1일)에도 연내 유엔 가입 실현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1년도 중에 유엔 가입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의 단호한 의지를 밝힌 4월 5일자 정부 각서를 유엔 안보리 문서로 배포하였고, 각국 수도와 유엔을 중심으로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각국의 지지 획득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1991년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유엔 가입 추진을 위한 정부 특별교섭단을 9개반으로 편성, 37개국에 파견하여 각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게 되어 국제적 지지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한국의 유엔 가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소련과 중국도 남북한의 유엔 가입에 관하여 보다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경우, 마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 대통령이 수교 후 불과 반년 만인 1991년 4월 방한하여 역사적인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명하였다. 중국도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분위기를 인식하여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북한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유엔 가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 분위기를 인식하게 된 북한은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5월 27일자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유엔 가입 신청을 발표하였고, 7월 8일에는 유엔 가입 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정부는 8월 5일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남북한의 유엔 가입 신청서가 8월 8일 단일 결의로서 안보리에 회부되었고, 안보리는 이를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총회로 회부하여 제46차 유엔 총회 개막일인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40여 년간 한국외교 최대 현안의 하나였던 유엔 가입이 실현되자 정부의 유엔외교는 물론 외교 전반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인권, 개발 등 경제·사회 문제가 역점과제로 부상하면서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유엔외교에 적극 참여하였다. 정부는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주요 문제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한 사전 정치 작업을 이룬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유엔외교를 추진하였다.

한국의 유엔외교는 짧은 기간 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유엔 가입 5년 만에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 기관인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였고 다수 국제회의에 의장단으로 참여하였으며, 유엔 총회의장과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하였다. 또한 소말리아, 동티모르, 레바논 등지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으며, 군축·환경·인권 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의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에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에 한국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역임

유엔 가입 이후 우리 정부는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제고를 주요 외교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및 각종 개발지원사업에의 기여 증대 등 제반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에 유엔 내에서 중견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1996-1997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였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유엔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방안이 되고, 또한 냉전 종식 이후 점차 그 역할과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유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44개국에 대통령 특사 1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전개하였으며, 1995년 11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177개국 중 156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집트, 기네비소, 폴란드, 칠레와 함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유엔 회원국 중 많은 국가들이 유엔 가입 이후 한번도 안보리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한번 진출에 평균 십여 년씩 소요되는 것이 국제현실임에 비추어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4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한 것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우리의 외교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 정부는 1997년 5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안보리 최초로 난민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 토의를 개최하고 이에 관한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 되도록 하여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난민보호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무총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요청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관련 사안인 1996년 9월의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아시아 지역문제인 1997년 7월의 캄보디아 사태와 중동 지역문제인 이라크 사찰 문제에 대한 안보리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과 비동맹 이사국 간에 컨센서스를 촉진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국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3-2014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 제67차 유엔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이사국 진출 선거를 위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전개 중이다.

라. 유엔 총회의장 수임

한국은 2001년 지역별 순환 제도에 따라 아시아·대양주 그룹에 배정된 제56차 총회 의장직에 한승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제56차 유엔 총회 개막일인 9월 11일은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날로, 뉴욕과 워싱턴에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제56차 총회 개막이 불가피하게 하루 연기되었으며, 한승수 총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테러리즘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강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국이 총회의장을 수임한 기간(2001년 9월-2002년 9월)은 이외에도 새천년 선언 이행, 유엔 총회의 활성화,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 인권·민주주의 확산, 테러 근절 대책수립, 정보화 격차 해소, 아프리카 개발 등의 주요 의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된 시기다.

한승수 총회의장은 취임 즉시 테러규탄 결의안을 총회의장 발의로 채택시킴으로써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천명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국제 테러리즘 대응 논의를 6위원회에서 총회 본회의로 이관하여 긴급 의제로 다루도록 했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회의에서 유엔 총회 단일 의제로서

사상 최대인 167개 유엔 회원국이 발언에 참여하여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시켰다.

2010년 유엔 총회에서는 테러 대응 국제협력 이외에도 문명 간 대화, 새천년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다루어졌으며 팔레스타인 관련 긴급 특별총회가 개최되어 총회보다도 국제적 관심을 크게 받은 총회가 되었으며, 국제개발재원 동원 및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개도국으로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승수 총회의장은 2001년 9월부터 12월 총회 본회기 기간 중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국 정상급 인사, 외교장관 등 총 78회에 걸쳐 회담 또는 예방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엔과 코피 아난(Kofi A. Annan)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수상하게 된 2001년도 노벨 평화상을 유엔을 대표하여 수상하였다.

한국은 유엔 총회의장직 수임으로 인해 9.11 테러 사태에 대한 대응, 빈곤타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강조 등 시급한 세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세계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효율적 해결 방법 등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은 향후 우리 정부의 유엔외교에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이 되었다.

마.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 및 의장단 참여

정부는 유엔 가입 후 유엔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유엔 산하기구의 이사국과 주요 회의 의장단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유엔 가입 4년 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1992년에는 경제·사회 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의사결정기관인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처음 진출하여 이사국을 역임(1993-1995년)하였다. 이후에도 1997-1999년 임기, 2001-2003년 임기 및 2007-2009년 임기의 ECOSOC 이사국에 진출하여 총 네 차례 이사국을 수임

하는 등 활발한 유엔외교를 전개하였다. 2008년 주유엔 대사가 ECOSOC 부의장에 선출됨으로써 개발, 환경, 인도적 지원, 인권 등 각종 경제·사회 분야 의제 토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의 ECOSOC 이사국 진출은 각종 국제기구 선거교섭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1997년 시행된 선거에서 유엔 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CSW: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UNCCPCJ: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등 각종 유엔 산하기구에 이사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특히 1997년 11월 개최된 IMO 제20차 총회에서는 최동진 주영국 대사가 총회 의장직을 수임하였는바, 이는 한국 최초의 유엔 전문기구 의장직 진출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2001년 A그룹(주요 해운국 그룹) 이사국 진출 및 네 차례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2000년 2월 ECOSOC 조직회의에서는 유엔 난민최고대표(U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사국으로, 2000년 9월 WHO 서태평양 지역회의에서는 WHO 이사국으로, 2000년 4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총회에서 불법소유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CP: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위원국으로 각각 피선되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김학수 사무총장이 ESCAP 사무총장에 재임하는 등 경제·사회 분야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활발히 참여하였다.

한국은 2006년 3월 15일 유엔 결의를 통하여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의 초대 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5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유엔 회원국 2/3 이상인 148표를 획득하여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진출하였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 내 선도적인 인권·민주주의 국가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 볼 수 있다. 또한 군축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는데, 2006년에는 제60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위원회),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및 유엔 군축위원회(UNDC: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등 유엔의 3대 군축 기관의 의장직을 동시에 수행하여 다자외교 및 군축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6년 창설된 평화 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에서 한국은 2009-2010년간 위원국으로 선임되고 2009년에는 부의장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유엔 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 지속개발위원회(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등 유엔의 각종 주요 산하기구와 전문기구에 이사국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위원, 국제문화재보존복구 연구센터(ICCRUM: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이사,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원, 여성지위위원회(CSW) 위원국, 범죄 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위원국,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위원국,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사국,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사국, UNESCO 무형유산보호정부간 위원회 위원국 등으로 진출하여 인권,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였다.

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은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엔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서 2009년 6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10만여 명의 군·경과 민간인 3만여 명이 참여 중이며, 연간 예산도 유엔 정규 예산의 3배 이상인 71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유엔에 대한 PKO 분담금 10대 기여국이며, 인적 참여에 있어서는 119개 PKO 파병 국가 중 38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엔의 PKO 신속 참여 노력과 함께, 한국 정부도 1995년 2월 유엔 상비체제에 약 800여 명의 한국군 요원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유엔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995년 이래 ‘신속배치 주도그룹’ 26개국의 일원으로 신속배치본부 조기설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유엔의 신속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1993년 소말리아에 250여 명의 공병대대(상륙수 부대)를 파견한 이래 총 14개 유엔 PKO 임무단에 참여했다. 2008년에는 인도·파키스탄(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그루지아(UNOMIG: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Georgia), 라이베리아(UNMIL: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아프가니스탄(UNAMA: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수단(UNMIS: United Nations Mission in Sudan), 동티모르(UNMIT: 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 네팔(UNMIN: United Nations Mission in Nepal) 등 평화유지부대에 27명의 군 옵저버를 파견하고, 레바논(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에 359명 규모의 보병부대(동명부대)를 파견하는 등 8개 PKO 임무단에 40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에 국회에서 레바논에 파견하는 동명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은 중동 지역 평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였다.

2008년 유엔 평화유지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6월 서울에서 PKO 국제회의(Seoul Conference on Peacekeeping Operations)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PKO 주요 참여국 20여 개국과 유엔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PKO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간 참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서울 회의는 향후 국내 및 국제 PKO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부는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유엔 PKO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관련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고 유엔 내 PKO 논의에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한국의 실질적 기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표 1〉 한국의 PKO 참여 실적

국 가(지역)	임 무	규 모	파견기간
소말리아(UNOSOM II)	재건 및 건설, 각종 대민지원 활동	장교 30명, 부사관 32명, 공병 190명	93. 7~95. 2
서부사하라(MINURSO)	의료지원	장교 27명(군의학관 8명 및 간호장교 6명 포함), 부사관 및 의무병 22명	94. 9~06. 5
앙골라(UNIVEM III)	인도적 재건지원, 정전감시	장교 22명, 부사관 16명, 공병 160명	95.10~97. 2
동티모르(UNTAET)	동티모르 독립정부 수립지원, 선거감시	장교 66명, 준사관 1명, 하사관 189명, 보병 163명	99.10~03.10
사이프러스(UNFICYP)	유엔특사 보좌	사령관 1명	02. 1~03.12
브룬디(ONUB)	정전감시	군읍저버 2명	04. 9~06.12

〈표 2〉 한국의 PKO 참여 현황

국 가(지역)	임 무	규 모	파견기간
인도 · 파키스탄 (UNMOGIP)	카시미르 지역 정전감시	군읍저버 10명	94.11~현재
그루지아(UNOMIG)	휴전협정 이행감시	군읍저버 7명 (부단장 1명 포함)	94.10~현재

라이베리아(UNMIL)	정전감시	군읍저버 1명, 참모장교 1명	03.11~현재
아프가니스탄(UNAMA)	재건지원	군읍저버 1명	03.11~현재
수단(UNMIS)	정전감시	군읍저버 7명	05.12~현재
동티모르(UNMIT)	치안유지	경찰 1명	06.12~현재
네팔(UNMIN)	치안유지	군읍저버 2명	07. 3~현재
레바논(UNIFIL)	평화 정착 및 재건지원	367명(동명부대 359명)	07. 7~현재

(2009년 5월 현재 396명 파견, 38위)

샤. 유엔 사무국 등 국제기구에 한국인 진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91년 유엔 가입 당시에는 총 139명이 진출해 있었으며, 2009년 6월 현재 325명의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국장(D급) 이상 고위직 20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등 국제재판소의 재판관으로 4명이 진출해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도 많이 진출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s) 유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 운영,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 관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이 주관하는 채용시험인 NCRE를 1992년부터 총 12차례 국내에 유치하여 2009년 6월 현재 48명이 합격하였고 이중 27명이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한편, 외교부는 1996년부터 JPO를 매년 평균 5명씩 선발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젊은이들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은 후 국제기구 직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년 6월 현재 파견 기간이 만료된 JPO 54명 중 44명이 국제기구 직원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유엔 사무총장 진출

가. 추진 배경

지역별 순환이라는 유엔 사무총장 선출 관행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5년 중반부터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내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40년에 가까운 외교관 경력과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장 등 유엔 관련 경험, 그리고 외교장관으로서 관리자적 역량 등 개인 자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를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결정은 한국이 그간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추진 경과

2005년 10월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를 결정하고 우선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조용한 진출 교섭을 추진해 나갔다.

우선 우리 정부는 2005년 9월 제60차 유엔 총회, 2005년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2005년 12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각료회의, 200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국들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공식적인 대외 입후보 천명 이전에도, 반기문 장관의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주요 국가들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인 지지 입장과 지원 용의도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 정부는 2006년 2월 14일 반기문 외교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대외적 입후보 공식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조용한 교섭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국 위주의 교섭 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갔다.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순방, 반기문 외교장관의 아르헨티나, 페루 공식 방문 및 아랍연맹 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및 중남미 지역의 지지세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2006년 4-5월 덴마크, 그리스, 카타르, 탄자니아 방문, 2006년 7월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정상회의 등 계기도 적극 활용하였다. 2006년 6월에는 인도 출신 사시 타루(Shashi Taru) 유엔 공보담당 사무차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공식 입후보하여 총 4명이 공식 입후보한 상황이 되었다.

2006년 7월 안보리 내 1차 예비 투표를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친 예비 투표에서 반 장관은 계속 최고 득표로 앞섰다. 9월 14일 2차 투표와 2주 후에 실시된 3차 투표에서 여타 후보들과 점점 득표수를 벌이자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기 시작하였다. 10월 3일 4차 투표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투표용지를 구분해 실시되었는데,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최종 선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차 투표 결과, 반기문 장관은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찬성 14표, 기권 1표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인도의 사시 타루 후보 등 다른 모든 후보들이 사퇴를 표명하고, 안보리는 반기문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총회는 2006년 10월 13일 만장일치로 반기문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반 장관이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여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006년 12월 14일 취임 선서식을 갖고, 2007년 1월 1일자로 공식 임기를 개시하였다.

한국의 유엔 사무총장직 진출은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국제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3〉 역대 유엔 사무총장

구	성명	출신지	재임기간
제1대	트리그브 할브단 리(Trygve Halvdan Lie)	노르웨이	1946~1953
제2대	다그 함마솔트(Dag Hammarskjold)	스웨덴	1953~1961
제3대	우 탄트(U Thant)	미얀마(버마)	1962~1971
제4대	쿠르트 발트하임(Kurt Waldheim.)	오스트리아	1972~1981
제5대	하비에르 페레스 데 꾸에(Javier Perez de Cuellar)	페루	1982~1991
제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	1992~1996
제7대	코피 아난(Kofi A. Annan)	가나	1997~2006
제8대	반기문(Ban Ki-moon)	대한민국	2007~

제2절 보편적 가치 추구하고 범세계적 문제 대응

1. 인권 일반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빠른 경제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정착에 힘입어 인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한국은 현재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을 비롯한 7개 핵심 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이 국제규약들을 국내에서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이룩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전세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표 4〉 주요 인권협약 가입 현황

협 약 명	협약 채택 (발효)	당사 국수	우리나라 가입(발효)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CCPR) Int'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규약)	66.12.16 (76.3.23)	163	90.4.10 (90.7.1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 Int'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규약)	66.12.16 (76.1.3)	159	90.4.10 (90.7.10)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Int'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5.12.21 (69.1.4)	173	78.12.5 (79.1.4)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9.12.18 (81.9.3)	185	84.12.27 (85.1.26)
고문방지협약(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12.10 (87.6.26)	145	95.1.9 (95.2.8)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11.20 (90.9.2)	193	91.11.20 (91.12.20)
이주노동자권리협약(CPRMW) Int'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90.12.18 (03.7.1)	39	미가입
강제실종협약 Int'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07.2.6 (미발효)	10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7.3.30 (08.5.3)	42	08.12.11비준 (09.1.10 발효)

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 활동

한국은 1946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인권 논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뒤이어 2006년 6월 설립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서 활동하였고, 인권이사회에서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사국으로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주제별 인권 이슈와 북한, 미얀마 등 국가별 인권사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의 보편적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지지를 하고 있다. 그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06년 유엔 총회에서의 찬성표결을 제외하고는 2003년 이래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2003년 표결 불참)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 제63차 유엔 총회와 2009년 제10차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상황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 투표하였다.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중시하고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나. 취약계층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외교활동

(1) 여성

유엔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를 설립하고 세계 여성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975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세계 여성회의를 개최하여 여성문제를 범세계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우리 정부는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가입한 데 이어, 2006년에는 동 협약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1994년 이래 UNCSW 위원국을 연임하고 있으며, 2004년과 2005년 UNCSW 의장국 수임, 2008년과 2009년

부의장국 수임 등 여성 관련 국제무대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여성 관련 논의 동향을 참고하여 국내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 등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여성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하여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성안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성권리 강화에도 노력하고, 2008년 12월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2) 아동

유엔의 아동권리 보호 관련 국제활동은 1945년 유엔 설립 시부터 전개되었다. 초기에는 빈곤한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채택 이후에는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1년 UNCRC에 가입하였고, 2000년 UNCRC의 2개의 선택의 정서를 비준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은 1994년 이후 주요 공여국으로서 기여하고 있으며, 1988-1997년간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UNICEF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2004년부터 매년 한-UNICEF 양자협의회를 갖는 등 UNICEF의 대개도국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하면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난민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였다. 세계 각지에서 인종, 종교 등에 기인한 크고 작은 분쟁과 이에 따른 난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난민보호에 관한 핵심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에 가입하였고, 국내적으로도 2001년부터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다. 2000년부터는 유엔 내 난민구호 총괄기구인 유엔 난민최고대표(U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집행이사국으로 국제 난민 보호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UNHCR 주한대표부가 서울에 설치되어 국내외 난민보호를 위한 한국과 UNHCR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2. 민주주의 증진

한국은 1980년대 말 이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로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코자 노력해 왔다. 민주주의의 방식과 과정은 각국마다 다양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행을 ‘보편적 가치’로 보고, 민주주의 관련 위협에 공동대응, 신생 민주주의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0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범한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라는 범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협력체의 출범 시부터 공동 주도국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한국은 2002년 11월 10-12일간 서울에서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투자(Democracy: Investing for Peace and Prosperity)’라는 주제로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후에도 2005년 4월 칠레 산티아고(Santiago)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 및 2007년 11월 말리 바마코(Bamako)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적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2008년 10월 31일 아시아·태평양 민주주의협력체(Asia-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고위급 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동 협력체의 출범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동 회의 개최 이후 2008-2010년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07년 10월 출범한 민주적 거버넌스 협력체(Partnership for Democratic Governance)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재정 기여 및 운영그룹 회의 참여 등을 통해 거버넌스 취약국가(fragile state)를 지원하고 있다.

3.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국제사회는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Hague)에서 개최된 평화회의에서 최초로 군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인 군축 논의는 1945년 유엔의 탄생 이후 재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핵무기가 사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축 논의는 종전의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0년대에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이, 1997년에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이 각각 발효되었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보다 본격화된 군축 논의는 9.11 테러 사태 이후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그 운반 수단인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 차원의 노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가. 국제군축·비확산 체제 참여

한국은 1990년대 유엔 및 주요 군축·비확산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제군축·비확산 관련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WMD 확산이 국제평화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WC, BWC 등 주요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핵비확산과 함께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1957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방지를 주관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가입하였으며, IAEA의 사찰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7년 채택된 IAEA 추가 의정서에 1999년 서명하고 2004년 이를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등 30여 개의 국내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IAEA 정기 사찰을 받아 왔으며, 2008년 IAEA로부터 우리의 핵활동 투명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승인받은 것은 한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우려 국가 및 집단에 의한 WMD 확산 활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다자 수출통제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 등 모든 다자 수출통제 체제에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국내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국내 수출통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다자 수출통제 체제 관련 논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3년 5월에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NSG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2004년 10월에는 서울에서 MTCR 총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지역 내 미사일 확산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2007년 3월에는 호주와 공동으로 전략물자의 중개(brokering) 통제에 관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제적인 무기 불법중개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9.11 테러 사태 이후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가들 간의 공조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역시 G8 글로벌 파트너십(GP: Global Partnership),

화물안보구상(SFI: Secure Freight Initiative),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등에 참여하며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6월 G8 GP에 참여한 이래 러시아 퇴역 핵추진 잠수함 해체 작업 및 우크라이나 국경 탐지장비 구매·설치 작업 등 각종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2006년 12월 해상 화물 검색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SFI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2008년 4월 부산항 감만부두에 핵·방사능 탐지장비 및 영상검색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WMD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2003년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체제인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2006년부터 부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해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고 PSI 차단 훈련을 참관하는 등 참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2009년 5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우리 정부는 PSI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국제군축·비확산 분야의 주도적 역할 수행

우리 정부는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각종 군축 기구 및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군축·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다자 무대에서의 한국외교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한국은 2003-2004년도 NSG 의장국으로서 핵수출 통제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2004년에는 MTCR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대외 활동을 펼치며 국제 미사일 확산방지 노력에 기여하였다. 2005년에는 재래식 무기와 일반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WA의 일반실무그룹 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제60차 유엔 총회 1위원회(국제안보·군축)의 의장국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2006년 2-3월에는 세계 유일의 다자 간 군축 협상 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의장국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유엔 군축위원회(UNDC: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2년간 중단되었던 UNDC 실질 토의를 재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각종 유엔 정부전문가 패널에 참여하며 관련 논의 활성화 및 한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2007년에는 유엔 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회의 의장직을 수임하는 등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유엔과의 협력도 강화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02년 이래 매년 유엔 군축실과 공동으로 '제주 프로세스'로 불리는 '국제군축·비확산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 WMD 및 미사일 확산문제, 수출 통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군축·비확산 회의는 2010년 NPT 평가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어 다자 핵연료 공급보장 구상, NPT 체제 강화, 북한 핵문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저명한 군축·비확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동 회의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 인지도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동 회의의 지속 발전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 회의 전용 웹사이트(<http://jejuprocess.tistory.com>)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제63차 유엔 총회 1위원회에 한국 주도의 '불법 중개 방지 및 대응(Preventing and combating illicit brokering activities)' 결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두 차례 상정하여 채택한 바 있으나,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실질 현안에 관하여 한국 주도의 결의안을 상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큰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한국이 최초로 상정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61개의 공동제안국을 확보하는 등 유엔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 국제군축·비확산 체제 및 우리나라의 가입 현황

	구 분	협약 발효	가입국	남/북한 현황	주요 미가입국
국제 협약	핵확산금지조약 (NPT)	68.7 채택/ 70.3 발효	191개국 가입	한국 75.4 가입 북한 85.12 가입 03.1 탈퇴선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CTBT)	96.9 채택/ 현재 미발효	148개국 가입 (180개국 서명)	한국 99.9 가입 북한 미가입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등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93.1 채택/ 97.4 발효	185개국 가입 *09.2 이라크 가입 예정	한국 97.4 가입 북한 미가입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등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72.4 채택/ 75.3 발효	163개국 가입	한국 87.6 가입 북한 87.3 가입	이스라엘 등
	대인지뢰금지협약 (오타와협약)	99.3 발효	156개국 가입	남북한 미가입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83.12 발효	108개국 가입	한국 01.5 가입 북한 미가입	
	확산탄금지협약 (CCM)	08.5 채택 현재 미발효	94개국 서명	남북한 미가입	미, 중, 러, 터키, 인도, 이스라엘 등
국제 기구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	56.10 헌장채택 57.7.29 설립	145개국 가입 164개국 발효 90개국 발효	한국 57.8 가입 북한 74.6 가입, 94.6 탈퇴	미국, 브라질 등 미비준
	제네바 군축회의(CD)	84.2 설립	65개국 가입	남북한 96.6 가입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	59. 설립	69개국 가입	한국 94.9 가입 북한 미가입	이스라엘, 뉴질랜드, 벨라루스 등
수출 통제 체제	원자력공급그룹 (NSG)	78.1 설립	45개국 가입	한국 95.10 가입 북한 미가입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쟁거위원회(ZC)	74.8 설립	36개국 가입	한국 95.10 가입 북한 미가입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발트 3국 등
	호주그룹(AG)	85.4 설립	41개국 가입 (EU포함)	한국 96.10 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러시아 등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87.4 설립	34개국 가입	한국 01.3 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파키스탄, 인도, 시리아, 이스라엘 등
	바세나르체제(WA)	96.7 설립	40개국 가입	한국 96.7 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벨라루스, 이스라엘, 인니 등
기타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 (HCOC)	02.11 설립	130개국 가입	한국 02.11 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확산방지구상(PSI)	03.5 설립	93개국 참여 중	한국 09.5월 정식참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집트 등 미참여

(2009년 5월)

4. 테러 동향 및 대응

최근 테러, WMD, 마약밀매, 기후변화, 대규모 전염병 등의 초국가적 안보 위협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테러는 전세계 문명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현재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포함하여 폭탄테러 및 납치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테러기법 역시 정교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들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정부는 형태와 목적을 불문한 어떠한 테러행위도 용납할 수 없고 테러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기본 입장에 국내적으로는 테러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테러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 국내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테러대응 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연간 약 1,300만 명의 해외 여행객, 해외 진출 기업, 파병 군인에 대한 테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시설 보호를 위해 관련 국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을 통해 테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개정 여권법 시행령을 발효(2007년 7월)하여 폭동·테러·천재지변 등의 위험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한국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2008년 12월 기준 여행 금지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47호)’을 바탕으로 테러대책 협의체 및 관련 매뉴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테러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 등의 테러 취약 지역에 대한 파병·원조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 12개 대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 국제 테러리즘 협약’의 조속한 채택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동시에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개도국의 대테러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명 간 연대’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3(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 등 지역기구 내에서의 대테러 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7-2008년 APEC 대테러대책반(CTTF: Counter-Terrorism Task Force) 의장국 수입 등을 통해 대테러 국제공조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5. 불법자금 이동 대처

자살테러 1건을 자행하기 위해 수만 달러가 소요되며, 9.11 테러 사태와 같은 대규모 테러를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금줄을 봉쇄하여 테러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대테러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지하 경제가 만연되는 경우 테러자금 조달을 조장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테러자금 차단, 불법자금차단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유엔 대테러위원회(CTC: Counter-Terrorism Committee)는 테러지원 행위를 범죄화하고 테러자금 제공 방지 등 관련 유엔 회원국의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1989년 G7 정상회의 이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각국의 관련제도 이행평가를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설립되어 국제 테러자금 차단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적 기준 권고 및 실질적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그룹(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테러자금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FATF의 국제기준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 10월 APG 정회원국 가입, 2006년 8월 FATF 옵저버 지위 획득 및 정회원 가입 추진, 34개국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사회의 테러자금 차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과 테러단체·테러리스트에 대한 자산동결·거래제한 및 관련 정보 공유 등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4년 2월 국회 비준)'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효(2008년 12월) 등 관련 국내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절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1. 한국 개발협력의 역사

가. 원조 수원의 역사

한국의 국제 개발협력 참여는 원조 수원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 1945년 독립 및 한국전쟁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12.7억 원의 원조를 제공 받았다. 이후 선진국으로부터의 외자 도입이 활성화 되고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원조 수혜 규모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세계 은행의 차관 대상국에서 졸업하고 2000년 개발원조 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또한 유엔의 대표적 개발 기구인 유엔 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도 2000년부터 우리나라를 순기여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나. 원조 공여의 시작

한국의 원조 공여는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지원에 기초한 삼각협력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지원하에 개도국 연수생 초청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65년부터 자체적인 연수생 초청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의 개발원조는 1970년대까지 주로 유엔의 지원하에 실시되었으나, 1977년 외교부가 최초로 1백만 달러(9억 원) 상당의 물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1982년부터 개도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개발 교환프로그램(IDEP: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s)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원조 사업이 개시되었다.

다. 개발협력의 발전

한국의 개발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설립이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87년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자 300억 원의 EDCF를 설치하였으며, 1991년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KOICA를 설립하였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게임 개최, 1995년 유엔 가입, 1996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 이후 국제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국제 사회의 빈곤퇴치 및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 노력에 대한 참여 필요성이 보다 증대되었다. 특히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개발협력은 한국의 외교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중요성은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양적 증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ODA는 198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까지의 총액이 57.1억 달러(잠정)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8년에는 2000년 212백만 달러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802백만 달러(ODA/GNI 0.09%)를 기록하였다.

라. 외교정책과 개발협력

우리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개발협력이 갖는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자·양자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 개발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다른 공여국들과의 정책일관성 제고와 조화를 위해 OECD DAC, 유엔 개발재원회의, 주요 유엔 개발기구 집행이사회 등 여러 개발 관련 다자회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영국, EU, 일본 및 주요 유엔 개발기구와의 양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또한 개발협력 과정에서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도 개최해 왔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한국의 원조정책 선진화 작업과 함께 2010년 OECD DAC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개발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 부처 내 개발협력과 관련한 조직과 제도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2006년에는 개발협력 관련 범부처적 의견조율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국제개발 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외교부, 재정부 등 20여 명의 관계부처 장관 및 ODA 관련 기관장,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ODA 관련 최고 결정기구로, 동 기구의 ODA 확대 결정은 범정부부처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2007년 8월 외교통상부에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로 구성된 개발협력국을 신설하여, ODA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개발협력에 보다 집중된 외교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 한국의 개발협력 목표

우리 정부는 주요 외교정책으로 개발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협력 목표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및 개도국과의 우호관계 증진도 한국의 개발협력 추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 한국 개발협력 현황 및 확대 계획

가. 2008년 ODA 현황

한국의 2008년 ODA는 순지출 기준 전년 699백만 달러 대비 14.0%가 증가한 802백만 달러,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는 0.09%로 잠정 집계되었다. 동년 한국의 ODA를 인플레이션 및 환율을 고려한 2007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91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5% 대폭 증가한 수치다. 한국의 ODA를 다른 22개 DAC 회원국과 비교하면 GNI 기준으로는 DAC 회원국 평균 0.30%(잠정)에 비해 1/3 미만 수준이며, 규모면에서도 하위권(1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 상기 통계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지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8년 한국의 대북지원은 약 116백만 달러이다. 그중 프로젝트 원조는 88백만 달러, 기술협력은 1백만 달러, 개발식량원조는 7백만 달러, 인도적 지원은 7백만 달러, 행정비용은 1백만 달러, 정부(공공기관)에 의한 차관은 12백만 달러이다.

나. ODA 총량 추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ODA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양자 대 다자의 비율은 대략 70대 30 수준을 유지하여 DAC 회원국의 원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자원조의 경우 2002년까지는 유상원조가 무상원조보다 많았으나, 2003년 이후부터 동 현상이 역전하여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보다 많아졌으며, 이후 무상원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6〉 2000년 이후 한국의 ODA(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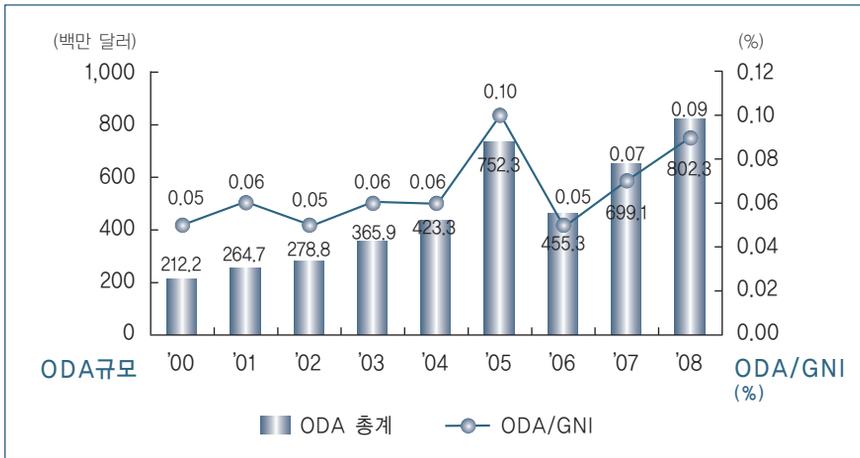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잠정)
공적개발원조(ODA)	212.1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802.3
① 양자 간 협력	131.2	174.5	206.8	245.2	330.8	463.3	376.1	493.5	539.2
○무상원조	47.8	53.0	66.7	145.5	212.1	318.0	259.0	361.3	368.7
○유상원조(EDCF)	83.4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132.2	170.6
② 다자 간 협력	80.9	93.1	72.0	120.7	92.6	289.0	79.2	205.6	263.1
ODA/GNI(%)	0.04	0.06	0.05	0.06	0.06	0.10	0.05	0.07	0.09

다. 중기 ODA 확대 계획

한국은 2008년 8월 제4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에서 ODA 규모를 2012년까지 GNI 대비 0.15%,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 ODA 확대 계획을 결정하였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동 경기침체가 ODA 확대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해 개도국 빈곤층의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기 ODA 확대 계획에 따라 한국은 ODA를 꾸준히 확대하여 개도국 빈곤퇴치와 MDGs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그림 1〉 2000년 이후 한국의 ODA(순지출 기준)



3.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

가. 무·유상원조 제공 확대

과거 한국의 대외원조사업은 뚜렷한 정책 방향 및 실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담부처 없이 각 부처, 기관 및 단체가 산발적으로 실시해 왔다. 따라서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재원의 배분, 원조효과 및 행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1년 1월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 4313호)을 제정, 한국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외교부 산하에 KOICA를 설립하였다.

KOICA는 설립 이후 2008년까지 총 1조 8,354억여 원을 지원하며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및 긴급 재난구호 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3,055억 원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인 1998년의 538억 원

대비 약 5.7배 증가한 규모에 해당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프로젝트 사업, 연수생 초청과 전문가 파견 등의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해외봉사단 파견, 재난복구,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사업의 경우 지원방침 변경에 따라 2008년도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유관부처로 사업을 이관하였다.

2008년 6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신청사 및 국제협력 연수센터를 3년 만에 신축하여, 기존에 위치해 있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에서 이전하여 국제협력 사업의 규모 확대에 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무상원조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9년 5월 말 현재 KOICA 본부는 이사장, 감사(비상근), 4이사, 6부, 5실, 1반, 20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사무소는 아시아 11개소, 아프리카 7개소, 중남미 5개소,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5개소 등 27개국에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튀니지, 팔레스타인 등 다섯 곳에 주재원을 파견 중이다. 해외 사무소 및 주재원 55명을 포함, 총 225명의 KOICA 직원은 한국의 대개도국 무상원조를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EDCF는 개도국의 중장기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개도국과의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허성 장기 저리차관으로, 주로 정부 출연금 및 재정·용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 현재 동 기금의 조성액은 약 2조 3,060억 원에 이르고 있다. EDCF 차관의 주요 지원 국가는 2008년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6,500달러 이하인 국가 중 EDCF 운용위원회가 심의·결정한 90개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이며, 정부는 2008년 12월 현재 동 90개 국가 중 45개국에 대해 200개 사업, 총 4조 7,616억 원의 EDCF 차관지원 방침을 결정하였다. EDCF 차관은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68%)에 중점적으로 공여되고 있으며, 지원 분야별로는 교통(28.8%), 수자원개발(18.2%) 및 에너지(10.7%) 분야 등에 주로 지원되고 있다.

나. 무상원조의 효율적·전략적 집행 강화

우리 정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무상원조사업 예산의 효율적·효과적 집행을 위해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중기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2008-2010년) 수립,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배분전략 등의 방안을 마련, 추진하였다. 즉 우리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협력대상국을 선정, 중점 및 일반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현재 무상원조 협력대상국은 중점 19개국 및 일반 협력대상국 37개국이다.

또한 제3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2007년 12월 27일)의 의결에 따라 2008년 1월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CAS(2008-2010년)를 수립하여 일관된 정책 및 전략하에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CAS(2009-2011년)를 개정하여 수원국의 상황 변화, 국제사회의 원조 흐름 등을 새로 반영하였다.

지역별로는 한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 기초를 유지하면서 최빈 지역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고, 중남미 및 CIS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 등을 감안, 동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점차 증가하였다. 2008년도 지역별 지원 실적을 보면 행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아시아 111.4백만 달러(40.2%), 아프리카 58.6백만 달러(21.2%), 중남미 32.7백만 달러(11.8%), 중동 및 중앙아시아 31.9백만 달러(11.5%) 등을 지원하였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상위 10개국에 전체 무상원조의 35.3%, 상위 20개국에 54.3% 이상이 지원되었다.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총리 주재)를 통한 원조정책 및 방향 조율, 무·유상원조 부처(기관) 간 협의체제 유지, 무상원조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원조의 효율적·효과적

이행뿐만 아니라 취약 국가 재건지원 및 MDGs 달성을 위한 아프리카 지원 확대 등 전략적 집행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이를 위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및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대하였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추진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03-2007년까지 총 2.6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며, 2007년 5월 ‘이라크와의 국제협약(ICI: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회의’ 당시 2008-2011년까지 총 2억 달러(유·무상 각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2008년에는 총 1천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이라크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아르빌 지방정부의 재건 및 경제개발 등을 통한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재건 복구 지원팀인 ‘아르빌 지방재건팀(RRT: Regional Reconstruction Team)’을 2007년 2월 출범시켰다. 아르빌 RRT는 이라크 재건지원 및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등 당초 파견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뒤 2008년 12월에 종료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뿐만 아니라 전후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2-2008년까지 직업훈련원 및 의료지원사업, 연수생 초청 등을 통해 총 6,6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 6월 아프가니스탄 원조공여국 회의에서는 2009-2011년까지 총 3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기로 서약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에는 동의·다산 부대 철수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동의·다산부대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 2008년 6월 30일 개원하여 매일 70여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개원 이후 약 8,000명의 민간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09년 5월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존의 아프간 의료·직업훈련팀 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병원 및 직업훈련센터를 신축하고 직업훈련 및 태권도 교관을 신규로 파견할 예정이며, 2010년 초부터 의료·직업훈련팀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파키스탄의 재건 및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이 동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임을 인식, 2009년 4월 동경에서 개최된 파키스탄 원조공여국회의 시 향후 4년간(2009-2012년) 2억 달러 규모의 유·무상원조 지원을 서약하고 FoDP(Friends of Democratic Pakistan) 협의체 참여 등 파키스탄의 장기적·종합적인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정과 재건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 요소라는 인식하에 한국 역시 이 지역의 개발과 안정을 지원하고 중동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원조를 제공하였다.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총 1,33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 12월 팔레스타인 원조공여국회의 시 2008-2010년간 2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키로 공약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가자(Gaza) 재건지원 국제회의 시 2009-2010년간 추가로 2백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을 서약하는 등 앞으로도 팔레스타인의 안정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강화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취약국가 재건지원뿐만 아니라 최빈 대륙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대하였다. 특히 전세계 빈곤인구의 1/3이 거주하는 아프리카의 개발과 발전이 국제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임을 인식하고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즉,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7>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2006년)

-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포괄적 지원 계획
- '08년까지 '05년 대비 대아프리카 ODA를 3배까지 확대
- 향후 3년간 아프리카인 1천 명을 초청하고, 봉사단파견을 대폭 확대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
- 보건의료·인적자원·농업·수산업 및 정보화 격차 해소 분야 지원

2008년에는 이니셔티브 발표 이전인 2005년 대비 약 4배가 확대된 총 6,20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아프리카에 제공하였고, 3년간 1천 명의 아프리카 연수생 초청 계획에 따라 2006-2008년까지 총 2,045명을 초청,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인적자원 개발 및 이 지역의 MDGs 달성에 공헌하였다. 특히 빈곤지수 및 개발 수요를 감안하고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보건·의료 및 교육환경 개선, 인적자원개발, 농업개발 등 전략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고 원조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한국은 지난 3년간의 대아프리카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개최되는 2차 한-아프리카 포럼 계기에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2009-2012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 다자 개발기구를 통한 협력 확대

우리 정부는 양자원조의 협력효과나 추진 기반이 미흡한 국가 및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개발 원조를 수행하여 한국의 원조 효과성을 제고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다자원조 추진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사업 수행방식 및 평가 노하우 습득 등을 통해 우리 원조 수행 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해 왔다.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확대를 본격 추진하여, 2008년에는 KOICA를 통한 국제기구 협력사업 지원 규모가 약 2,000만

달리에 도달하였다. 향후 한국은 ODA 확대 계획에 맞추어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그간 다수 국제기구에 대한 소규모, 일회성 지원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UNDP, 유엔 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등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주요 기구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전략화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 이행 이외에도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중장기적 협력방향 등을 논의하여 국제기구와 제도적·전략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06년부터 ‘한·UNDP 정책협의회’를 연례 개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UNDP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해가고 있으며, UNICEF와도 연례 양자협의회를 통해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다자차원의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의 대표적인 UNDP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2010년부터는 서울에 UNDP 정책센터를 설립하여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국제기구의 원조 효율성 제고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는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선진 공여국들의 공동 성과평가 시스템인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9년부터 선진공여국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수원국 현장에서 주요 다자기구의 원조 효과성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 다자원조 구성면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 대한 출연 및 출자가 약 70%, 유엔기구에 대한 기여금이 약 24% 수준으로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다자지원이 다자개발은행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IBRD, ADB 등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와 출연 업무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며, 유엔 개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금 납부는 외교통상부 및 각 업무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라. 혁신적 개발자원 참여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출연되는 ODA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여타 개발자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7년 9월 대표적인 혁신적 개발자원인 항공권연대기여금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여외교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소액(1,000원)의 기여금을 자동 납부하는 이 제도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연간 약 15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한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조성된 기여금을 국제 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및 국내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의 아프리카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질병퇴치에 지원하여 국제보건 분야 M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자원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혁신적 개발자원 리딩그룹(Leading Group on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에 2006년 3월 출범 이래 참여해 왔으며, 2007년 9월에는 리딩그룹 의장국으로서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4. ODA 선진화

한국은 ODA의 선진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원조정책 추진 및 안정적이고 투명한 ODA 자원 확보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8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에서

* 개도국 개발을 저해하는 3대 질병(HIV/AIDS, 결핵·말라리아) 퇴치 목적으로 2006년 9월 설립된 기구로서, 특히 최빈개도국에 3대 질병 치료 의약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데 기여한다. 항공권연대기여금을 주요 제정한 기반으로 하는 이 기구에서 한국은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2010년 선진공여국 그룹인 OECD DAC 가입 추진을 결정하고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준비절차의 일환으로 2008년 3월부터 9월 까지 DAC가 주관하는 특별검토(Special Review)를 수검하였으며, 2009년 1월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9년 중 DAC의 가입심사를 거쳐 2009년 11월 DAC 가입심사회에서 가입이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ODA 체제 선진화를 위해 ‘ODA 선진화 추진계획(2009년 5월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의결하고, ODA 통합평가체제 구축, ODA 기본 계획 및 통합 국별 지원전략 수립, 비구속성 원조 비율 제고 등에 대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진공여국과의 양자·다자 정책대화, 수원국과의 원조협약, 국제 개발원조 관련 주요 국제회의의 참가, 2011년 제 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 the 4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공여국, 수원국 간의 정책 조화를 제고해 나가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 강화에 힘쓰는 ‘국민참여형 ODA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연례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서울 국제회의(Seoul OD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개설된 ‘ODA Korea’ 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를 개설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현황을 소개하는 등 ODA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인도적 지원 활동 강화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 강화 노력은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논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대외원조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자연재해 및 분쟁 등으로 급증하는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KOICA의 해외긴급재난구호 예산을 9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2008년 7월에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관행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고자 인도적 지원 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양자(KOICA) 및 다자(유엔 등 국제기구)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령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가 소집되고 피해 현장에 해외긴급구호대가 파견되는 등 외교통상부가 총괄·조정하는 해외긴급구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미얀마 사이클론처럼 동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여 우리 정부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 (UN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에 참여 중이며 유엔 중앙 긴급대응기금(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에 아시아 지역의 주요 공여국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편, 유엔 합동지원요청(CAP:

*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자금 배정을 목적으로 OCHA가 운영하는 기금이다.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에도 지속적으로 기여 중이며, 유엔 재난 평가조정단(UNDAC)***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엔의 대표적인 인도적 기구인 WFP, UNICEF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및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등 인도적 지원 분야의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지원을 통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주요 인도적 지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 UNOCHA의 인도적 지원 조정 임무를 지원하는 ‘UNOCHA 공여국 지원그룹(ODSG: UNOCHA Donor Support Group)’에 가입한 데 이어, 2007년 7월에는 국가별 인도적 지원 문제를 토의하는 협의체인 ‘인도적 지원 연락그룹(HLWG: Humanitarian Liaison Working Group)’, 2009년 7월에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주도하는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향후 우리의 인도적 지원 정책과 관행을 보다 선진화·체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사회의 만성적인 인도적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유엔 및 여타 기구들이 인도적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OCHA의 재원조달 시스템이다.

***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현황 평가 및 여러 기구들의 구호활동 조정을 목적으로 OCHA가 파견하는 재난평가조정단이다.